

부산지역의 근대문화유산과 역사인식 문제

—부산의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제점숙* · 송봉호**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부산,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기존 연구의 쟁점
- III.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근대문화유산 현황
- IV. 부산의 등록문화재와 ‘근대’라는 역사인식
- V. 나가며

| 국문초록 |

이 글은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부산 근대유산의 현황과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부산의 근대유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근대’라는 역사 부재의 표면적인 논의에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의 근대유산을 ‘마이너스 유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에는 ‘친일·항일’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글에서는 부산의 등록문화재 중 일제시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부산

* 동서대학교 일본어학과 제1저자 / momoko1003@hotmail.com

** 한신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공동저자 / sbh-71@hotmail.com

임시수도 정부 청사'와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을 사례로 근대유산의 '근대'라는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산 임시수도 정부 청사'의 경우, 경남도청 이전을 둘러싸고 진주에서 부산으로의 이전 과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반대운동과 저항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피란수도 부산 기록물'의 표상으로서 임시정부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은 조선 전기사업을 둘러싼 독점적 경영과 고수익 획득에만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과, 이를 통제하고자 전력통제정책을 실시한 총독 부와의 마찰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부산의 근대유산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조선인과 일본인의 중층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사적 의미는 배제된 채 보존과 활용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자'라는 일본(일본제국)을 내재한 '근대'의 유산에 대한 의미를 향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부산,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일제시기, 아시아 문화유산

I. 들어가며

근대문화유산¹⁾을 둘러싼 논의는 철거에서 보존, 보존에서 활용, 재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각도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그 성과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 축적되어 가고 있다. 특히, 근대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1)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근대', '문화'라는 용어를 어떤 측면에서 접목을 시켜야 할지, 또한 어떤 의미로 인식해야 할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근대라는 역사가 함의되어 있고 또한 당대의 문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유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의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근대라는 시기를 상징하는 건축 또는 유물'이라는 일차원적 개념 안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글에서 근대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개화기 기점으로 하여 한국 전쟁 전후까지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문화재'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따르고 있으며, '근대유산'이라 함은 용어 그대로 근대에 만들어진 유산을 지칭한다.

좋은 예라 할 수 있는 군산을 비롯하여, 대구, 인천, 서울, 목포 등 근대 유산에 대한 관심은 근대사 재조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어 가는 추세다. 한국 근대의 첫 관문인 부산 역시 2004년 약 10개월 동안 본격적인 조사²⁾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부산의 근대유산 관련 보존, 활용에 대한 인식은 타 지역에 비해 아직까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부산의 근대유산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이유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 즉 식민지라는 부정적 역사 인식을 대표적 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말하자면, 현재적 관점에서의 근대에 대한 역사인식은 근대유산에도 적용되어 근대유산의 현재에서의 공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무엇보다 첫 개항지인 부산의 근대유산을 보존, 활용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의 근대유산의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근대라는 역사 인식의 재고, 즉 근대라는 역사인식을 어떻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인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부산 근대유산의 현황과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부산의 근대유산을 둘러싼 그간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둘째, 이를 통해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근대유산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부산의 근대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을 위해, 근대유산을 둘러싼 ‘근대’라는 역사인식에 대해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2) 2004년 4월~2005년 2월에 걸친 조사에는 4개 대학의 8명의 연구원과 16명의 연구보조원이 근대문화유산 조사 작업에 참여하였다. 부산광역시,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보고서』, 부산광역시, 200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근대유산을 둘러싼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근대유산의 보존과 활용하는데 있어 그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I. 부산,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기존 연구의 쟁점

근대유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종래의 지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유산 및 건축물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 2001년 7월 1일 ‘등록문화재’ 제도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근대유산 보존에 대한 견해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실제적 보존 현황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는 근대유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³⁾

지금까지 한국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쟁점은 주로 문화재청에서 규정한 근대라는 시기에 한정지어 건축물에 대한 가치에 집중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말하자면, 건물에 대한 실지 조사와 건축학적인 측면에서의 현상 설명과 보존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일제잔재로서 청산해야 될 굴욕의 유산, 즉 저항과 독립의 유산이다. 둘째, 현대를 잇는 가교로써 한국의 근대를 확인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는, 근대라는 시기와 역사 교훈에 중점을 둔 유산이다. 셋째, 관광, 건축학(예술성), 지역 활성화 등 현재의 자원으로써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문화소비론적 차원에서의 근대유산이다.⁴⁾

3) 김정하, 『한·일 개항도시의 역사유적 보존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41,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a, 83쪽.

이러한 근대유산에 대한 인식은 부산의 근대유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첫 번째 이유인 일제잔재로써 굴욕의 유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한국 최초 개항지인 부산의 근대유산에 크게 영향을 끼치어 근대유산의 활용과 연구가 타 지역에 비해 진척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부산의 근대유산(근대문화유산, 근대건축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부산의 근대유산을 둘러싸고 주로 언급된 논의는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한 선정기준, 보존 및 활용문제로, 주로 건축학적 측면에서 논해지고 있다. 정이순은 부산의 현존 건축물사례를 중심으로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한 선정기준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데, 7가지의 선정기준인, 역사적 가치, 효용가치, 건축적 가치, 상징적 가치, 경제적 가치, 지역적 가치, 학술적 가치를 제시하여 근대건축물의 효율적인 보전방안의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산 지역 근대건축물인 시도지정기념물로 지정된 근대건축물 4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1건의 건축물, 중구, 동구, 서구지역에 현존하는 10건의 근대건축물에 관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기의 선정기준을 적용시켰다.⁴⁾ 정이순이 제시한 선정기준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은 떨어지지만, 부산지역의 근대유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척도를 개별적 제시가 아닌 전체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순 제시할 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척되지

-
- 4) 즐고, 『근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역사인식 문제-‘근대’라는 역사인식의 행방-』 『비교일본학』 35,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5, 72~73쪽.
 5) 정이순,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한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부산의 현존건축물 사례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근대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가치의 경우 모든 관련연구에서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항목이다. 이에 각 연구의 개념을 종합하고 사례에 나타난 개념과 비교·분석하여 살펴보면, 크게 이론적 개념과 틀린 점 없이 개념이 유사하여 이론적 개념이 그대로 선정기준으로 선정되었다. 그 개념은 건립된 지 5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시간성을 가지며,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것, 특정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된 것,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건축물, 역사적 인물과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다.⁶⁾

이상의 내용에서는 근대라는 역사적 개념이 기존 선행연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순히 근대라는 시간적 개념만 염두에 두고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대’라는 역사적 개념은 시·공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근대유산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홍순연·김기수는 부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사례에 나타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근 높아진 근대유산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존의 가치 기준이 불분명함을 지적한다. 즉,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가치 선정에 있어 보존 및 활용방법이 달라졌지만 현재까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논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근대문화유산 보존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를 고찰하고, 나아가 외국의

6) 정이순, 위의 논문, 2005, 79~80쪽.

보존 및 활용사례에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⁷⁾ 부산의 근대문화유산의 특징에 대해, 초기에는 문화유산이 가져야 할 진정성 보존을 위해 물질적 가치인 건축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위주로 보존되고 활용하였지만, 최근 들어 비물질적 가치인 역사적, 미래지향적 가치를 통한 보존 및 활용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 근대문화유산의 경우로, 아직까지 수많은 근대문화유산들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 혹은 사회적 관심에서조차 벗어나 있는 실정이라 지적한다. 특히 이들은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한다.⁸⁾ 이들의 연구는 역시 앞서 정이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근대문화유산의 건축사적 측면과 가치를 부각시키고, 근대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심층적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한계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

한편, 김정하의 다음 연구들도 부산 근대유산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빼놓을 수 없다. 첫 번째 그의 연구 『釜山의 日帝遺跡에 對한 現場論的 考察』에서는 일제유적을 역사교육이나 문명사적 자료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민도시로서의 근대 부산의 모습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산의 일제유적에 대한 인식이나 보존방식, 활용방안 등을 숙고하여 일제의 근대화가 한국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한다. 즉 부산은 일본인의 성향과 조선인의 성향이 뒤섞인 3원적 체제를 이룬 점점의 도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문화접변(文化接變)에서의 다양성과 복잡성, 모순과 갈등, 경쟁과 변화 등의 양상을 두루 추적할 수 있음을 논한다.⁹⁾

7) 홍순연·김기수, 『부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사례에 나타난 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10-3(통권35호), 대한건축학회, 2008a, 35~36쪽.

8) 홍순연·김기수, 위의 논문, 2008a, 46쪽.

9) 김정하, 『釜山의 日帝遺跡에 對한 現場論的 考察』 『동북아 문화연구』 5, 동북아시아

또한 2012년도 그의 두 편의 연구에서는 개항도시로서의 부산과 나가사키(長崎)의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개항도시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고찰-부산과 나가사키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나가사키와 부산의 근대역사유적의 보존을 비교한 뒤,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입장과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가사키가 일찍부터 외래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자기화한 데 비해, 부산은 일제에 의해 왜곡되고 굴절된 서구문물을 최근야야 문화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한다. 그러나 생활문화와 관련된 역사유적의 보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식민주의적 질곡이 더 심했던 부산이 도리어 탈식민주의적 변용에 더 적극적이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동아시아 개항도시로서의 부산과 나가사키는 문물의 전파나 수용만이 아니라 역사유적의 보존과 활용에서도 연관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¹⁰⁾

같은 해의 또 다른 연구 『한·일 개항도시의 역사유적 보존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에서는 근대화 과정을 대상화함으로써 외래문물을 수용해낸 주체적 역량에 주목하여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시 부산과 나가사키를 비교 고찰하고 있다. 나가사키는 역사유적을 주체적으로 서구문물을 수용한 개화의 상징으로 여기는데 비해, 부산은 이를 일제의 억압적 식민지배의 부산물로 여기고 문화재로서의 가치 부여를 상당기간 미루어왔다 한다. 서구문물을 수용한 일제에 의한 한국 침탈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체적 근대화의 과정을 확인하면 근대역사유적의 가치를 도출함과 동시에 식민주의를 극복하는 논리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¹¹⁾

문화학회, 2003, 29~52쪽.

10) 김정하, 『개항도시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고찰-부산과 나가사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6,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화연구소, 2012b, 152~153쪽.

11) 김정하, 앞의 논문, 2012a, 83~99쪽.

이상 김정하의 연구는 기존의 건축사적 측면, 예술적 측면에서 언급되어 왔던 부산의 근대유산을, ‘근대’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자 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주체가 오로지 조선인의 관점에서만 주목할 뿐, 근대라는 공간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한 ‘일본-조선’이라는 관점에서의 시각은 결여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근대 부산이라는 도시공간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식민지라는 ‘근대’ 공간이었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문명과 제국주의가 동시에 밀려오는 ‘근대’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근대의 유산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조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부산지역의 근대문화유산 그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근대의 부산지역 주요건축물의 입지 및 계획적 특성에 대해 고찰한 연구가 김영분·김기수의 논문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의 도시 부산이 일제에 의해 계획적으로 형성된 식민도시였다는 점, 나아가 거류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시간적 변화 속에 도시공간이 변화하고 주요건축물들이 형성되었다는 관점에서 근대기 부산의 주요건축물들을 재조명하고 있다. 즉, 역사적 사건과 시간적 변화에 따라 도시공간과 주요 건축물들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근대기 부산 주요건축물의 계획적 특성을 고찰하였고 그 결과 근대기 부산에 준공된 주요건축물은 도시적 변화에 따라 신축될 장소의 입지가 건축물의 기능과 건축적 특성에 만족하였을 경우에는 이전하고(부산지방법원, 경남도청 등),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공간을 유지하였음을 지적하였다.(초량왜관, 전관거류지 등)¹²⁾ 근대문화유산을 직접적인 사례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산이라는 지역을 시공간적으로 다룸으로써 건축물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12) 김영분·김기수, 「근대기 부산 주요건축물의 입지 및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9-3, 대한건축학회, 2013, 203쪽.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부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부산도시재생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강동진은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부산이 가장 많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부산의 특징인 산복도로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재생사업의 성과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표면적인 결과에 비해 재생사업의 근거가 되는 역사문화환경들이 왜 소중하고 또한 미래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화된 논의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을 동시에 지적한다. 강동진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난 10여 년 동안 부산 지역 역사문화환경과 관련된 52건의 재생사업들에 대해 분석,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시조직, 생활, 산업유산, 문화경관 등 세 가지 요소들이 부산 역사문화환경의 핵심적인 근원(체)라는 점을 규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일상의 삶 개선, 맥락보존, 부산다움의 발굴을 역사문화환경과 관련된 부산 도시재생의 지향점으로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³⁾

이와 비슷한 맥락인 부산의 문화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산업유산에 주목한 이광국·양위주의 연구에서는 부산 자갈치 건어물시장 내 가로배열을 사례로 근대산업유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식 점포병용주택 배열이 가로공간에 어떤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최근 문화도시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통해 ‘도시재생’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도시발전의 전략적 관점에서 대두된 산업유산의 재활용을 통한 부산 원도심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¹⁴⁾

13) 강동진,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부산도시재생의 특성과 지향』 『열상고전연구』 48, 열상고전연구회, 2015, 63~95쪽.

14) 이광국·양위주, 『문화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산업유산의 특화 공간 디자인에 대한 연구-부산 자갈치 건어물시장 내 가로를 사례로-』 『동북아문화연구』 4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6쪽.

이처럼 부산을 둘러싼 근대유산, 역사문화환경 관련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근대’의 유산이 함의하고 있는 중층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역사학계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및 정의는 ‘근대’라는 역사 부재의 표면적 논의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Ⅲ.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근대문화유산 현황

1. 부산의 지역적 특성

근대기 부산지역 연구에 대한 중요성은 ‘왜관’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왜관은 일본과 조선, 일본과 동래, 대마도와 동래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당시 담으로 둘러싸인 왜관 주위는 조선인 군인들에 의해 통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된 공간 역시 사람들이 사는 일상과 연결된 공간이었기에, 통제 속에서도 적지 않은 교류들이 일탈을 감행하여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개시(開市)와 조시(朝市)라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제적, 문화적 섞임의 공간에서는 양국 상인들의 경제활동이 이미 왜관이라는 경계를 의식하지 않은 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⁵⁾

15) 김동철, 「17~19세기 부산 왜관의 開市와 朝市」,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2012. 차철욱·양홍숙,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학 연구』 2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참조.

이후, 서구 열강을 모방하고 있던 일본이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여 1876년 부산을 시발로 1879년 원산, 1883년 인천 등이 차례로 개항하게 되었다. 근대적 문명의 항구에는 상인과 유학생, 나아가 도항자들이 분주하게 문물과 함께 왕래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 질서가 와해되는 양가적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부산과 같은 개항도시는 식민도시적 특성인 이중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속에 사는 사람들과 그 생활양식도 어느 정도 잡종성(hybridity)을 지니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해양-내륙, 민중-선비, 유동-정착, 이주-토착, 식민-자유, 도시-농어촌 등등 서로 이질적인 문화들이 교차하는 곳이 부산인 것이다.¹⁶⁾ 이는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한국의 근대도시로서의 출발이었다. 이처럼 부산, 나아가 한국의 도시 근대성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종성을 전제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부산이라는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은 해양과 내륙을 매개한다는 점이다. 해양은 근대와 더불어 형성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 이러한 삶의 양식에는 근대성과 식민성이 혼재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하여 식민지 사회인 조선의 경우 일방적 수탈과 일원적인 저항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이 스스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식민지근대성’을 형성하였다는 관점도 가능할지도 모른다.¹⁷⁾ 하지만 무엇보다 당시의 부산지역의 근대화라는 것은 주체와 타자¹⁸⁾—그것이 조선

16) 구모룡, 『부산: 식민도시와 근대도시를 넘어서-부산연구의 문화론적 접근』 『인천학연구』 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14쪽.

17) 구모룡, 위의 논문, 2008, 16쪽.

18) 타자성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동일자의 변이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동화되고 이해되고 전유되어야 하는 타자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동일자로 환원될 수 없는, 동일자와 비대칭적 관계에 있는 타자이다. 이 글에서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앞서 언급한 어느 한 쪽의 의미에 치우치기보다는 끊임없는 교차관계(갈등, 협력, 저항 등)를 유지하면서 상호 밀접한 영

인이든 일본인이든—가 상생하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저항·억압 등 긴 항관계 속에 근대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부산의 근대화의 과정임과 동시에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경험하는 일본의 근대화의 한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부산은 이러한 식민지적 근대의 특성이 집약된 도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산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경험한 도시이다. 뿐만 아니라 6.25전쟁, 피란시대, 국가 재건기를 차례로 거치며 형성된 부산의 다양성과 특이성은 한국 근대사의 한 축을 이루기도 한다. 부산은 이러한 역사 변천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다. 전근대시대의 문화재는 물론 영도다리, 임시수도정부청사, 임시수도관저, 백제병원, 남선전기,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송정역, 정란각, 유엔기념공원, 부산기상대, 일신여학교, 가덕도 등대 등 많은 유형의 근대의 문화재들과, 부산타워, 자갈치 건어물시장, 국제시장 등 비문화재이지만 다양한 근대유산들이 부산 역사문화환경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부산의 역사문화환경들은 개항이후 1970년대에 이르는 지난 백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산업사의 다양한 흔적과 기억들을 담고 있다. 이에 내포된 변화가 피동적이었거나 능동적이었던 간에 부산은 20세기 중·후반기에 이루었던 대한민국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특히 ‘부산항’과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의 물증들은 부산만의 강력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추진되었고, ‘감천문화마을’이 부산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또 최근에는 ‘피란수도 부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자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¹⁹⁾

향을 받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9) 강동진, 앞의 논문, 2015, 64~67쪽.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이라는 지역은 개항기에서 일제시기, 광복이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인과 일본인 관계에서 표출되는 잡종성, 혼종성과 같은 중층적 근대를 함의한 도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유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2. 부산의 등록문화재 현황

그렇다면 현재 부산의 근대유산의 현황은 어떠한가? 먼저 이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문화재청에서 정의한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²⁰⁾

먼저 등록문화재에 대해 살펴보면,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 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 ①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②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20) 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검색일:2016.09.21)

리 알려진 것

- ③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이러한 근대유산의 개념과 범위를 기준으로 2016년 9월 현재 지정된 국내의 등록문화재의 수는 672건에 이른다. 그 중 서울이 185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의 등록문화재 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18개에 불과하다.

<표> 부산의 등록문화재 현황²¹⁾

연번	종목	명칭	지역	소재지	시대명	지정일
1	등록문화재 제41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서구	부산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2가)	일제강점기	2002-09-13
2	등록문화재 제302호	부산 송정역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8번길 60, 외 (송정동)	일제강점기	2006-12-04
3	등록문화재 제327호	부산 북병산 배수지	중구	부산 중구 샘길 10 (대청동1가)	대한제국시대	2007-07-03
4	등록문화재 제328호	부산 구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	서구	부산 서구 망양로33번길 12 (서대신동3가)	일제강점기	2007-07-03
5	등록문화재 제329호	부산 구남산전기 사옥	서구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252 (토성동1가)	일제강점기	2007-07-03
6	등록문화재 제330호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동구		일제강점기	2007-07-03
7	등록문화재 제349호	부산 초량동 일본식 가옥	동구		일제강점기	2007-09-21
8	등록문화재 제359호	부산 재한 유엔기념공원	남구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93 (대연동)	기타	2007-10-24

21) 문화재청 홈페이지(검색일, 2016.09. 25), 시대명의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따른 것이다. 소재지의 빈칸 역시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연번	종목	명칭	지역	소재지	시대명	지정일
9	등록문화재 제376호	부산 구 성지곡수원지	진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 외 (초읍동)	대한제국시대	2008-07-03
10	등록문화재 제416호	디젤전기기관차 2001호	진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철도차량관리단		2008-10-17
11	등록문화재 제474호	광복군가집 제1집	서구		일제강점기	2011-08-24
12	등록문화재 제494호	부산 전차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00		2012-04-18
13	등록문화재 제554호	해양조사연보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152-1 해안로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타	2013-08-27
14	등록문화재 제568호	부산 경남고등학교 덕형관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1, 49, 1-28	기타	2013-10-29
15	등록문화재 제573호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 성당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99번길 5-1 (대청동4가, 성공회주교좌성당)	기타	2013-10-29
16	등록문화재 제641호	부산대학교 구 본관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0	기타	2014-10-30
17	등록문화재 제642호	부산대학교 무지개문 및 구 수위실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0	기타	2014-10-30
18	등록문화재 제647호	부산 구 백제병원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9번길 16 (초량동)		2014-12-26

한국 첫 개항지로 한국 근대의 시발점인 부산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정하의 다음 글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1910년대에 식민도시 부산에서 그들이 시행한 도시계획만 하더라도 일본인 주거지역은 변화가, 한국인 주거지역은 슬럼가로 고착되

는 차별논리의 고착결과에 다름 아니었다. 것처럼 이민족의 전래문화를 부정하고 현지인을 배제하는 식민주의적 방식을 부산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주체적 근대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근대의 발상지 서양에서 선포되었던 “정치적 차별이나 종교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근대도 아니었다. 다분히 일본풍이 가미된 ‘의양풍(擬洋風) 근대’는 ‘미성숙한 근대’이자 ‘가짜 근대’, 혹은 ‘유사근대’나 ‘의사(擬似, pseudo)근대’라 부를 만한 것이었다. 훗날까지 부산이 근대 역사유적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이라 본다.²²⁾

이러한 근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오늘의 부산 근대유산을 ‘마이너스 유산’으로 만들고 말았다. 물론, ‘마이너스 유산’으로 상징되는 일제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과 유산을 과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2002년 서구 부민동 법조청사와 중구 대청도 미문화원 건물을 보존하려 할 때 지역주민들은 “식민통치의 흔적에 보존이나 활용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며 “역사는 될 수 있으나 문화재는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²³⁾ 하지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부산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근대의 흐름은 일본이 만든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만의 근대는 아니다. 그 속에서는 식민지 도시라는 공간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공존하고 있었기에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근대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배양된 ‘친일-항일’이라는 이항대립적 도식은 근대의 유산을 인식할 때 일본이라는 타자를 부정하고 이제는 망각하고 싶은 그러한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 부산의 근대유산을 사례로 논하겠지만 오늘의 근대유산에서는 일제의 흔적을 그다지 찾아 볼 수 없다. 타

22) 김정하, 앞의 논문, 2012b, 132~133쪽.

23) 김정하, 앞의 논문, 2003, 2쪽.

자인 일본의 흔적은 삭제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근대만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친일-항일’ 구도의 민족주의에 힘입은 개발의 논리는, 근대유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산이라는 근대도시에 배양시켰고, 현재 뒤늦은 보존과 활용으로 2002년 첫 등록문화재 지정 후 2005년부터 다른 지역을 의식하며 분주해지고 있다.

IV. 부산의 등록문화재와 ‘근대’라는 역사인식

필자는 국내의 근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된 논고에서 ‘근대’라는 역사인식의 행방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문화유산’에서는 근대라는 역동적인 역사인식을 담아내지 못한 채 대부분 논의가 건축학적 측면,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관광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으로서의 근대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한 비판과 근대문화유산의 ‘근대’라는 역사 인식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최근 역사학계의 ‘근대’를 둘러싼 논쟁을 분석, 이를 국내 근대문화유산의 ‘근대’라는 역사 인식에 적용하여 고찰하였다.²⁴⁾ 여기에서 논하는 ‘근대’라는 역사 인식은 주체와 타자 공존의 역사인식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둔 시공간적 ‘근대’에 대한 역사인식을 말한다. 즉, 일국사에 치우친 현재중심주의적 근대라는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근대’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장에서는 위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부산의 근대유산을 사례로 ‘근대’라는 역사인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첫 근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뒤늦은 부산지

24) 졸고, 앞의 논문, 2015, 63-86쪽.

역의 근대유산에 대한 관심은 근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부산의 근대유산을 ‘마이너스 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는 ‘친일-항일’ 구도 속 근대를 바라보는 현재적 관점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부산의 근대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친일-항일’ 구도 속 역사인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로, 이를 바탕으로 부산의 근대유산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하 부산지역 총 18개의 등록문화재 가운데 2002년 지정된 ‘부산 임시수도 정부 청사’와 2007년에 지정된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을 이 글의 논지를 이끌어 갈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부산지역의 최초의 등록문화재인 ‘부산 임시수도 정부 청사’(2002.09.13. 제41호)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이 건물은 도청 소재지를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면서 건립한 경남도청으로, 한국전쟁 당시 임시 정부청사로 사용하였다. 처음 준공할 때는 ‘一’자 모양의 평면으로 구성하였으나, 1960년대 증·개축으로 ‘口’자 모양, ‘日’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정면 가운데에 현판 포치(porch)가 돌출되어 있고, 가운데와 양쪽 끝 부분을 돌출시키고 그 위쪽을 박공지붕으로 구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위엄 있는 입면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간직한 역사적인 건물로 구 경상남도지사 관사(지금의 임시수도기념관)와 더불어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근대 공공 건축물이다.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²⁵⁾

위 문장에서는 일제시기에 건립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전에 대한 언급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등록문화재 임시정부청사의 주된 내용은 ‘피란수도 부산 기록물’의 표상이다.

25) 문화재청 홈페이지(검색일, 2016.09. 25)

‘이 건물은 도청 소재지를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면서 건립한 경남도청으로’라는 문장에서 겨우 일제시기에 건립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경남도청 이전 문제는 단순하게 이전의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다.²⁶⁾ 이러한 과정 속에는 군사력 동원과 행정 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본제국의 의도가 숨어 있었고, 그리고 일제에 대한 저항, 나아가 생활에 위협을 느낀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조선인들의 힘겨운 저항이 내포되어 있었다.²⁷⁾ 또한 이러한 저항 속에는 지금의 ‘친일-항일’과 같은 이분법적 구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식민지적 특수한 근대가 내포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²⁸⁾ 진주시민의 저항은 도청이전 방지 동맹회조직의 결성과 함께 학생, 일반 상인, 농민뿐만 아니라, 기생들, 면사무소와 군청의 관리까지 참여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속에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제 침략에 맞추어 진주로 이주해 온 일본인 거류민 사회의 유력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주로 정착한 일본인들에게 도청 이전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국인 못지않게 훨씬 적극적으로 저항 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 같이 진주 지역의 한국인 유력자들과 일본인 거류민 사회의 유력자들이 경남의 행정 중심지로서 누려온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목적 아래 서로 협력하여 초기의 도청 이전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것이다.²⁹⁾

26) 대표적으로 윤해동은 이러한 중의적 관계를 ‘회색시대’라 논하며 이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윤해동, 『회색시대』, 역사비평사, 2003.

27)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1996. 김중섭, 『일제하 경남 도청과 주민 저항 운동』, 『경남문화연구』 18, 경남문화연구소, 1996, 223~256쪽.

28) 이와 관련해서는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참고 된다. 『부산일보』, 1925.1.1.7면, ‘慶南道廳移轉 反對運動의 經過’.

29) 김중섭, 앞의 논문, 1996, 252쪽.

이처럼 진주에서 부산으로의 중심지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저항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피란수도 부산 기록물’의 표상으로서의 임시정부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제 잔재에 대한 ‘떨어내기’는 일본과 공존했던 근대라는 역사인식마저 망각시키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해방 이후의 기억만 고스란히 간직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본과 공존하여 구축된 근대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에 국한된 반쪽짜리 근대의 유산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다. 명칭은 ‘부산 임시수도 정부 청사’이지만 그 속에 내포된 ‘근대’의 기억, 그것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근대이더라도 다시 한 번 들춰내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이라는 타자를 염두에 둔 ‘근대’라는 기억이 내재된 근대의 유산으로 당연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어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 (2007.07.03. 제329호)’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술내용을 참고하자.

이 건물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신인 남선전기 사옥으로 건립하였다. 1970년대에는 한국전력 부산지사로 사용하였으나, 한국전력의 조직 개편으로 현재 중부산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1층은 화강석 마감으로 사각기둥 형태의 필라스터(pilaster)를 이용하여 출입구를 강조하고, 2층 이상은 타일로 마감하였으며, 위쪽 처마선 아래에는 수평 돌림띠가 둘러져 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는 역사성이 있고 내부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한국 근대 사옥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³⁰⁾

상기 문화재청 기술 내용 어디에도 일제시기 남선전기 사옥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이 설명만으로는 남선전기 사옥이 이때 세워진 건물

30) 위의 문화재청 홈페이지(검색일: 2016.09. 25)

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힘들다. 남선전기 사옥은 엄밀히 말하자면 근대 유산이자 지금도 살아 숨 쉬는 현대유산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일제 시기다. 그렇다면 남선전기 사옥의 역사적 흐름, 세워진 경위 등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재가 오늘의 역사적 교훈이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속에서 한국의 근대라는 경험이 가져다준 문화유산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잘 표현해야 한다. 또한 근대문화유산의 ‘근대’라는 개념을 잘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사실은 한 국가에 치우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선전기 사옥은 어떠한 역사적 경위를 지니고 있는가? 이하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근대기에 있어서 전력산업은 도시화의 사회기반시설로서 근대 상공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하 독점자본, 국가독점자본의 존재행태가 어떠한는지, 나아가 이 시기 사회경제 구성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도 그 중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1911년 6월 대구전기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이후 1916년 와사(瓦斯) 증설 및 자매회사인 광주전기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며 대흥전기주식회사를 거쳐 경주전기 합병, 고성, 안동, 영덕, 하동, 감포, 구룡포, 여수, 제주, 순천, 벌교, 거제의 각 전기회사를 일제히 매수 합병하여 당시 난립되어 있는 전기회사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1937년 3월에는 대흥전기, 조선와사전기, 천안전등, 목포전등, 대전전기, 남조선전기 등 6개 회사를 합동하여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후 1945년 5월 남선전기주식회사로 그 이름을 개칭하게 된다.³¹⁾

3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홍순연·김기수, 「구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 부산지점의 건축물에 관한 현황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 학술 발표 대회 논

한편, 1937년 이와 같은 대대적 전기회사의 합동작업은 1931년 만주 사변, 1937년 중일전쟁과 맞물려 조선총독부의 전력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 전력업의 확대를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합동하기 직전의 정황을 경성일보(京城日報, 1936.12.12.)의 기사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자. 물론 여기에는 당시 조선총독부의 체신성(遞信省) 직원이 관여하고 있었다.

1. 전기요금의 인하
2. 전기보급발달
3. 회사 내용 강화 충실

이라는 대국적 견지에 입각하여 합동이라는 목적 하에 국부적으로는 약간의 분규는 면하기 어려웠지만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여 지난 3일까지 협의를 계속 한 결과, 드디어 6사는 하나가 되는 합동계약에 가조인했다. (중략)³²⁾

이러한 것에 대해 체신성(遞信省)의 이마이(今井)전기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튼 기분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합동에 대한 기운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이고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 회사의 열의를 반영

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b). 홍순연·황수환·김기수, 『한국전력공사 중부산 지점(구, 남선합동전기 주식회사 부산지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역사적, 지역적, 문화적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에코시티 논문집』 33-1,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한국자원 개발연구소, 2009.

32) 기사원문 :一、電氣料金の値下げ、二、電氣の普及發達、三、會社の内容強化充實の大局的見地に立脚して合同という目的に向って局部的には多少の紛糾は免れなかつたものの互讓協調の態度を以て去る三日まで協議繼續の結果、遂に前記六社は打って一丸となるべき合同契約に仮調印を終るに至つた。(『京城日報』, 1936.12.12. ‘大局的見地に立脚して南鮮電氣合同成る’ 번역은 필자-이하 동일)

하여 그것도 매우 협조적이고 계수적(計數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논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중략) 지점 설치, 직제, 급여 규정 등의 결정은 합동 실시 이후의 문제로, 또한 시설 계획, 요금 결정 등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시설 계획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으로서 조금도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지(內地:일본국내-필자) 사람들은 현재 체신성 통제문제로 성가신타라, 마침 여러모로 오해를 하여 그다음의 통제가 내지가 아닐까하여 오히려 내지 쪽에서 이 문제로 공격을 한 것에는 놀랐습니다.³³⁾

위의 기사에서는 이러한 합동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 약간의 분규가, 또한 이러한 분규의 주체가 일본인이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전력회사와 관련된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가능하다.

조선의 경제 장악을 목적으로 한 일제로서는 전력산업 경영권을 미국인의 손에 맡겨둘 수 없어,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를 비롯한 일본인 정상(政商), 재벌을 동원해 일한와사(日韓瓦斯)라는 가스회사를 설립해 1909년 8월 한미전기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 회사의 경영진은 상호를 일한와사전기(이하 일한와전)로 개칭하였다. 일한와전에서는 오하시신타로(大橋新太郎)를 최고경영자에 임명해 경영쇄신을 도모하였

33) 기사원문:とにかく氣持ちよく進みました合同に對する氣運はあくまで自主的で合同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各社の熱意を反映ししかも頗る協調的で計數的で結局理論的に會議を進行せしめ得たことは特筆すべきでしょう、(중략)支店設置、職制、給与規定等の決定は合同實施後の問題であつて施設計畫、料金決定等も同じであるが施設計畫以外の問題については当局として何等關与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とにかく大奮闘しましたよ、内地の連中は目下逓信省の統制問題がやかましい折柄色々な誤解して内地のさきがけの統制だろうなんて返つて内地の方から攻撃されたのには驚きました。(위의 신문, 1936)

다. 오하시는 취임 이후 회사의 명칭을 경성전기(이하 경전)로 고치고 대대적인 사업정리, 인적청산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영업 성적이 개선되고 차입금도 모두 변제해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하시는 주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고배당을 실시하며 정상이익의 확보를 위해 극단적인 이윤극대화 전략을 경영방침으로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전의 독점적 경영정책은 회사 내외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1920년대 경전의 독점적 경영정책에 대한 불만은 급기야 공영화운동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32년 조선전기사업령이 공포되고 전력통제정책의 주요 내용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리하여 경전은 소비자들의 요구와 총독부의 압력을 받아들여 설비와 서비스 개선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배당률도 10%로 제한되었다. 이는 그간 소비자의 편의를 무시하던 경전의 경영이 이 시기에 들어서 일정하게 조정을 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전의 경영방침이 근본적으로 수정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오하시의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이 강조되고 있었다. 전시 말에는 전시통제경제체제의 구축에 따라 전력국가관리의 시행이 요구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내 수력전기의 양적, 질적 우수성과 그간의 개발성과를 들어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했지만, 전쟁 확대에 따라 일본 정부의 요구는 한층 거세졌다. 마침내 총독부는 체신국 전기과를 식산국(殖産局) 산하로 이관하고 조선임시전력조사회를 설치해 전력국가관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³⁴⁾

이상의 흐름으로 보아 식민지 조선의 경성전기 남선전기를 주축으로 하는 전기사업에서는 우리의 근대 역사 인식으로 그려지는 ‘친일-항일’ 구도에서 볼 수 있는 조선총독부와 조선인과의 길항 관계는 엿볼 수 없다. 여기에는 조선 전기사업을 둘러싼 독점적 경영, 극단적인 이윤의 극

34) 오진석, 『한국근대 전력산업의 발전과 경성전기(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대화로 고수익 획득에만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과, 이를 통제하고자 전력통제정책을 실시하는 총독부와의 마찰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식민지 조선에 이어 일본 국내까지도 통제 문제가 강화될까 일본인들은 우려했던 것이다. 근현대 한국전력 사업의 발자취에 대해 연구한 이광제는 1930~36년대에 걸친 전력사업은 ‘일본인’의 사업으로 ‘조선인’의 성장은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³⁵⁾ 이처럼 남선전기 사옥이 우리에게 주는 근대라는 경험은 다양하다.<일본-조선총독부-일본인=일본제국>이라는 등식은 우리가 ‘친일-항일’ 구도 속에서 늘 상정해 왔듯이 반드시 성립된다 할 수 없다. 그 속에는 그들만의 협력, 갈등, 균열이 존재하였고, 또한 그러한 역사를 내 딛고 남선전기는 오늘날 한국전력주식회사 전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처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남선전기 사옥’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신이라는 의미부여와 건축사적 측면의 예술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식민지조선에서 일본인들의 삶과 조선인들의 삶의 역학관계를 중층적으로 담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첫 걸음은 ‘근대’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해야 하며 더구나 부산의 경우,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부산의 근대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더욱 더 폭 넓은 시각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 나가며

이 글은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부산 근대유산의 현황과 역사인식문제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부산 근대유산을 둘러싼

35) 李光帝, 「韓國電力業の歩み—「日本人」の電力業から「韓國人」の電力業へ—」, 早稲田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5(第2章「1930~1936年の電力業」참고).

선행연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연구현황이 ‘근대’라는 역사 부재의 표면적 논의에만 치우쳐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부산의 근대유산을 ‘마이너스 유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에는 ‘친일-항일’ 구도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탈피하고자 부산의 등록문화재 중 일제시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 ‘부산 임시수도 정부 청사’,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을 중심으로 근대유산의 ‘근대’라는 역사인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산 임시수도 정부 청사’의 경우, 경남도청 이전을 둘러싸고 진주에서 부산으로의 중심지 이전에 있었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다양한 저항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피란수도 부산 기록물’의 표상으로서의 임시정부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임시수도 정부 청사가 내재된 근대의 역사적 사실이야 말로 부산의 근대유산으로써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경성전기, 남선전기를 주축으로 하는 전기사업에서 조선 전기사업을 둘러싼 독점적 경영, 극단적인 이윤의 극대화로 고수익 획득에만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과, 이를 통제하고자 전력통제정책을 실시하는 총독부와의 마찰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는 조선 인과의 마찰은 크게 엿볼 수 없었다. 이처럼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신이라는 의미부여와 건축사적 측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대의 역사적 사실을 재고하여 ‘남선전기 사옥’의 근대유산에 대한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산의 근대유산에는 일제잔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탈피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근대유산의 보존, 활용, 재생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일제잔재에 대한 ‘밀어내기’로 일본과 공존했던 근대라는 역사인식마저 망각시키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해방 이후의 기억만 고스란히 간직하여 오늘날 근대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산의 근대유산은 일본과 공존하여 구축된 근대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에 국한된 근대의 유산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근대유산에 내포된 ‘근대’의 기억, 그것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근대이더라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오늘의 근대유산은 일본이라는 타자를 염두에 둔 ‘근대’라는 기억이 내재된 근대의 유산으로 당연히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야말로 부산의 근대유산을 부산과 한국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 나아가 ‘아시아의 근대유산’으로 전개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저서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1996.

윤해동,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2. 논문

강동진,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부산도시재생의 특성과 지향」 『열상고전연구』 48, 열상고전연구회, 2015.

김동철, 「17~19세기 부산 왜관의 開市와 朝市」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2012.

김영분 · 김기수, 「근대기 부산 주요건축물의 입지 및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9-3, 대한건축학회, 2013.

김정하, 「釜山의 日帝遺跡에 對한 現場論的 考察」 『동북아 문화연구』 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3.

_____, 「한·일 개항도시의 역사유적 보존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 『일본문화

- 연구』 41,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a).
- _____, 「개항도시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고찰-부산과 나가사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6,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화연구소, 2012(b).
- 김중섭, 「일제하 경남 도청과 주민 저항 운동」 『경남문화연구』 18, 경남문화연구소, 1996.
- 구모룡, 「부산: 식민도시와 근대도시를 넘어서-부산연구의 문화론적 접근-」 『인천학연』 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 이광국 · 양위주, 「문화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산업유산의 특화 공간 디자인에 대한 연구-부산 자갈치 건어물시장 내 가로를 사례로-」 『동북아시아문화연구』 4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 오진석, 「한국근대 전력산업의 발전과 경성전기(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정이순,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한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부산의 현존건축물 사례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제점숙, 「근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역사인식 문제 -'근대'라는 역사인식의 행방-」 『비교일본학』 35,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5.
- 차철욱 · 양홍숙,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학 연구』 2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 홍순연 · 김기수, 「부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사례에 나타난 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회총합논문집』 10-3(통권35호), 대한건축학회, 2008(a).
- _____, 「구 남선탐동전기주식회사 부산지점의 건축물에 관한 현황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 학술 발표 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b).
- 홍순연 · 황수환 · 김기수,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구, 남선탐동전기 주식회사 부산지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역사적, 지역적, 문화적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에코시티 논문집』 33-1,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한국자원개발연구소, 2009.
- 李光帝, 「韓國電力業の歩み-「日本人」の電力業から「韓國人」の電力業へ-」, 早稻田大學校 博士學位논문, 2015.

3. 기타

『부산일보』, 1925.1.1.7면, ‘慶南道廳移轉 反對運動의 經過’

『京城日報』, 1936.12.12. ‘大局的見地に立脚して南鮮電氣合同成る’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투고일: 2016.09.30. 심사완료일: 2016.11.22. 게재 확정일: 2016.12.07.

| Abstract |

Modern Cultural Heritage
in Busan and Issues of Historical Awareness
- Focused on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in Busan -

Je, jum-suk · Song, bong-ho

This paper was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modern heritage in Busan and the issues of historical awareness b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of Busan. In addition, through the preliminary studies on the modern heritage in Busan, this paper posed a problem that the concept, definition and study status of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have been only focused on the superficial discussion of the absence of the history of 'modern times', and pointed out that there is composition 'Pro Japanese Anti Japanese' strongly inherent in the viewpoint that the modern heritage in Busan is regarded as a "negative heritag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se preliminary studies, the issues of historical awareness on 'modern times' in the modern heritage was considered based on cases of the 'Busan Temporary Capital Government Building' and 'The Old Namseonjeongi Company Building in Busan' which were built in the colonial period, but have been rarely mentioned related to Japan, among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in Busan.

As for the 'Busan Temporary Capital Government Building', if there were no joint opposition movement and resistance performed by Koreans and Japanese during a transfer process from Jinju to Busan on the transfer of the Gyeongnam Provincial Government, as a symbol of 'Refuge Capital Busan Records', the Provisional Government Building would not have existed. In

addition, in the ‘The Old Namseonjeongi Company Building in Busan’, there is a historical fact inherent that there was a friction between the Japanese who were interested only in the monopoly management and the high profit-earning on Joseon Electric Business and the Governor-General that conducted the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 to control them. Like these, although the modern heritage in Busan is called 'Modern (times)' Cultural Heritage, only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re focused without remembering the historical facts of ‘modern tim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keep in mind the significance of the heritage of 'modern time' with consideration of Japan(The Empire of Japan), the 'Other Party'.

Key word: Busan, Modern Cultural Heritag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Colonial Period, Asian Cultural Heritage